

투데이 칼럼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가 서남대에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6월 7일 교육부에서는 대학 정상화를 뒤로 한 채 의대폐과와 남원캠퍼스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구제단축의 정상화계획을 공포하였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단축에서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남대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설명서와 도민서명부, 결의문을 전달하였고 시민결의대회와 1인 시위, 청와대와 교육부 앞에서 도민들의 간절함을 담은 꺾기대회를 셀 수도 없이 이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결국 교육 적폐와 한편에 서기로 한 것이다.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 간절하게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원하였고 지금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회생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학교정상화를 가로막는 집단이 바로 교육부이다.

그동안 명지병원, 삼육대, 예수병원, 서울시립대, 한남대, 부산은행

등이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교육부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서남대학교 구제단에서 저지른 비리 횡령금 330억원 담당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구제단에서 저지른 비리 횡령금을 새롭게 정상화하려는 기관에게 변제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선결로 임금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도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구제단의 비리횡령금을 산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교육관련법에 근거도 없고 지금까지 교육부가 처리하는 단지 관행일 뿐이다.

그동안 남원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은 이 정상화 촉구 건의를 수없이 해왔다. 12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이 없어졌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큰 대기업을 사라지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유치를 위해 지방공무원들은 사활을 걸고 노

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학교를 폐교쪽으로 몰고 가서 급기야 폐쇄명령을 내렸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기업유치를 위해 해수부와 산자부를 방문해서 법과 제도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덕분에 지역에 기업이 유치된 것이다. 그런데 해수부, 산자부와는 달리 교육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는 관행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울부짖어서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결국 폐교로 내몰았다.

구제단의 비리횡령금을 후임인수 기관에서 선결로 납부하라고 정이사 선정을 비리를 저지른 구제단과 협의하라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역경제가 폐쇄되어 죽어도 교육부 하고는 상관없고 교육부의 관심은 오로지 비리사화해단의 이익을 대

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재단비리횡령금의 선결조건이나 정이사 선정과 관련하여 구제단과 상의하라는 것 자체가 정상화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고 결국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어 폐교로 가면 그 재산이 모두 비리를 저지른 구제단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교육부에 수차례 찾아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서남대를 보건의료와 농생명분야에 특화시켜 지역의 명문으로 키우겠다고 했고 남원시민들과 학교관계자와 학생모두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 비리재단에만 이익이 되는 관행 때문에 부결시켜 버렸다.

서울시가 정상화시킬 돈이 없겠는가?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은 교육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남대폐쇄명령을 철회하고 고려병원과 부영에서 제시하는 정상화계획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영과 고려병원이 제시하는 정상화계획서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330억원 선납계획도 다 포함되어있다. 교육부가 구제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정 린

서남대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독자재언

고속도로 갓길 안전지대라는 위험한 생각

꿰고온 꽃들의 향연으로 세상이 뒤 덮이는 봄이다. 봄나들이로 이동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갓길 차로로 주행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장시간 운전의 피로로 인한 휴식, 급한 용변을 보기 위해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의 갓길을 잠시 쉬어가는 곳 등으로 오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갓길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인식 이처럼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도 안전삼각대를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세우고 삼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갓길에서 벗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해있을 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추돌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에 안전삼각대를 준비하고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기 드물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61조에 의해 안전삼각대 미설치 시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거리주행 등 차량 출고 시 안전삼각대 등 안전장구를 탑재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봄나들이 등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운전자들은 자발적인 안전 운전 의식으로 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갓길에서의 작은 규칙 하나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위험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독자재언

미성년자 성폭력에 강력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들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도와 및 재범방지 대책이 미흡하여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하여 이들이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여야겠다.

자신의 순간의 쾌락을 위해 어린이 등을 성폭행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생의 장애를 안겨주고 어린 여자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범죄자들로서 이 사회에서 완전 격리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겠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상담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자 중 적어도 절반이상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거나 누범자일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도, 관리 대책 또한 절실하다.

성범죄는 사인의 성격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입시내 드러내지 못하는데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고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사회적 부응으로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있지만 처벌강도가 낮고 가해자에 대한 뚜렷한 관리 대책이 미흡해 제2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국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병선 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경위

사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시대 대비해야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분권 시대 방침에 대비해야겠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 매진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경제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방침과 관련해 전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이지 지역발전이 이처럼 더디다면 희망적이지 않다. 도민들은 더 발전해야 한다는 욕심이다.

해마다 이맘 때 즈이면 늘 그랬거니와 지금의 연말 분위기도 도민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올해의 성과로 세계 팼버리 대회 유치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공모에서 여섯 곳이 선정된 것과 SOC 예산이 좀 확보됐다는 정도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그 성과가 더 좋으실 터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에게 도민들이 주는 믿음 예전 그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매진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북도는 지역간 재정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에 힘을 실어야겠다. 재정 격차를 그대로 두고서 재정분권이 성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북의 재정 능력 태반이 정부의 예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지역은 지역 발전을 이끌 대형 청사진이 새만강 말고는 없는 데 그것은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까닭이 크다. 그러므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려면 정부의 재정 분권에 대해 비상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수년 쯤 6조원대 예산을 가지고 자축하는 식으로 표내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도내 국책사업들의 힘찬 추진이다. 전주시의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책사업이라면 서로 특장의 연속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에 대해 대비하면서 전북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그 사업들의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주문하거니와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내야겠다. 전북도는 정부의 재정 분권 방침에 대해 긴장하는 가운데 더욱 분발했으면 하는 바이다.

근로 빈곤층과 함께 가야 한다

동짓날을 맞아서 생각이 많다. 본격적인 한겨울로 접어들었는데 근로 빈곤층들의 형편 때문이다. 그들의 큰 소리가 조금은 수그러들었지만 플레카드를 내걸고 시위하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다. 연말이면 전북도와 전주시가 늘 말해왔던 그대로 근로빈곤층과 함께 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내 어려운 세대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근로 빈곤층의 당면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은 일자리 지금, 승계 불안이며 물가 인상 때문에 빈곤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빈곤층을 챙기는 것은 우선순위가 왜 마땅하다.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문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는 곧바로 전북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근로 빈곤층의 요구를 포함해 민생 경제를 잘 살린다면 좋으려니와 그게 희망사항에 그치고 만다면 웰빙 시대를 기약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그동안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그래도 뜻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각을 해보면 그 성취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다.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일자리도 불안정하다면 희망이 없다. 그러나 지갑 얇은 근로 빈곤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생 안정은 앞으로도 우선순위가 왜 마땅하다. 전북 지역은 다른 고장보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다. 어음부도를 또한 그렇다는 보도이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가계 부채가 뇌관이 되고 있는 중에 전북의 부채자 비율 또한 최악의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니 전북도가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추운 겨울 날씨에 근로 빈곤층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함께 가야 한다는 당부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